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 우파정부 9년의 반성과 새로운 비전 모색  
발제자 : 이주호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일 시 : 2017년 09월 07일(목) 오전 07시 30분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제263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 요약 >

- 2016년부터 대통령 탄핵, 보수 분열, 대선 참패가 무기력한 야당을 낳으면서 ‘보수 궤멸론’마저 제기되었다. 우파 정치의 가치, 비전, 정책과 전략을 철저히 깨 살핀 후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우파 정치는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개인의 자유와 법치에 기반 한 시장의 활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오늘날 우파 정당은 ‘가치 정당’보다 ‘이익 정당’으로 변질되었으며 자기희생과 헌신이 부족하다. 우파 가치의 한계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 개개인이 더 이상 Fast-Follower가 아닌 First-Mover가 되어 새로운 산업과 플랫폼을 창출하는 개념설계 역량을 길러야 한다. 최근 N포 세대, 헬조선 등과 같은 신조어가 보여주듯이 세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우파 정치는 더이상 지역주의나 안보 불안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밝혀진 정경유착과 검찰비리 등 법치를 훼손한 문제를 근절하는 데 우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3세대가 새로운 과학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혁신 정책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 학습의 내용과 방식,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구조를 재창조하여 사회적 통합에 집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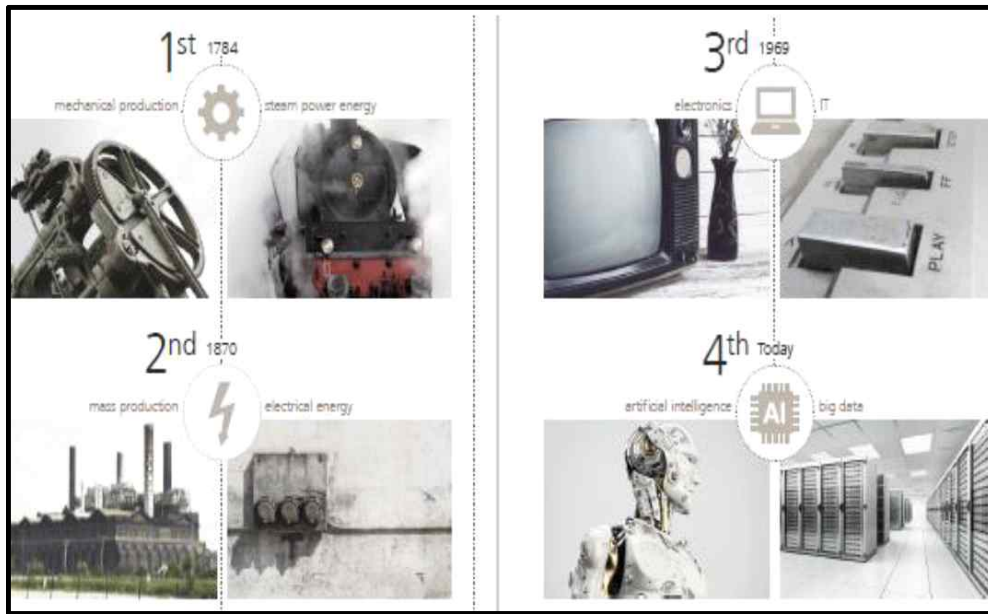
■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치 혁파, 학습 혁명, 노사 대타협과 국방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지난 70여 년 간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정부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활력을 크게 위축시키고 국익보다 사익을 쫓는 ‘관피아’ 문제를 촉발하였다. 부처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공무원이 승진에 유리한 인사·조직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려면 교육현장이 아래로부터 변해야 한다. 우선 교육전문대학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초중등 교육의 교사 학습방식을 크게 바꿔야 한다. 자본시장과 노동시장 혁신을 통해 노사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자본과 노동이 이동이 유연해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일자리 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노사 대타협과 이익 집단의 반발을 극복해야 경직적인 제도와 관행을 혁신할 수 있다. 국방연구개발을 대폭 개방하고 군 인력체제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또한 국방연구개발 기획의 민첩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방연구의 개방과 신속 기술개발 제도인 선행핵심기술 연구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기술주도형 기획을 강화해야 한다.

■ 세대교체란 기성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들이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길러주어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평적인 조직 구조를 만들어 청년들이 우파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무한정치 투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혁을 이루어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

## ◆ 우리 사회의 주요 가치

： 우파는 주요 가치 신장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두었는가?

- ◆ 2016년부터 대통령 탄핵, 보수 분열, 대선 참패가 무기력한 야당을 낳으면서 ‘보수 궤멸론’마저 제기되었다. 우파 정치의 가치·비전, 정책과 전략을 철저하게 살핀 후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우파 정치는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개인의 자유와 법치에 기반 한 시장의 활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오늘날 우파 정당은 ‘가치 정당’보다 ‘이익 정당’으로 변질되었으며 자기희생과 헌신이 부족하다. 우파 가치의 한계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림 1] 산업혁명의 발달 과정

## ◆ 혁신과 통합의 비전

: 우파는 새로운 세대의 욕구와 미래 변화에 대비했는가?

- ◆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을 준비하기 위해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016년부터 세미나와 연구 등을 통해 사회와 정부에 이를 확산시켜왔다. ‘혁신과 통합’으로 제3세대를 위한 First-Mover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우파 제1세대가 건국과 산업화를, 제2세대가 민주화와 선진화를 이끌어왔다. 광복 후 1970년대까지 초중등교육 보편화와 직업교육 강화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여 제1·2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따라잡았다. 1980년대부터 대학교육이 보편화되고 정보화를 주도하는 인재 기반을 구축하였다.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인터넷 혁명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조선, 철강, 석유화학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중국 등 경쟁국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 휴대폰, 가전제품 산업에 걸쳐서 추격하고 심지어 추월하고 있다. 오늘날 이런 산업은 세계시장이 포화상태다. 제3세대 인재를 키워야 한다. 에너지신산업, ICT융합,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소비재 등의 유망 신산업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무인자동차 등 제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비전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개인이 더 이상 Fast-Follower가 아닌 First-Mover가 되어 새로운

산업과 플랫폼을 창출하는 개념설계 역량을 길러야 한다. 최근 N포 세대, 헬조선 등과 같은 신조어가 보여주듯이 도전과 노력보다 미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세대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우파 정치는 더 이상 지역주의나 안보 불안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밝혀진 정경유착과 검찰비리 등 법치를 훼손한 문제를 근절하는 데 우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3세대가 새로운 과학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혁신 정책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 학습의 내용과 방식,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구조를 재창조하여 사회적 통합에 집중해야 한다.



[그림 2] 유망신산업과 경쟁우위산업을 양성하기 위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 ◆ 관치 혁파

: 우파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였는가?

- ◆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치 혁파, 학습 혁명, 노사 대타협과 국방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지난 70여 년 간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이것이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활력을 크게 위축시키고 국익보다 사익을 쫓는 ‘관피아’ 문제를 촉발하였다. 부처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공무원이 승진에 유리한 인사·조직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매트릭스

실행역량	개념설계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어진 설계도를 해석하고, 자원을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역량</li> <li>메뉴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전이 쉽고, 반복수행을 통한 학습효과(learning-by-doing) 존재</li> <li>여러 번 실행을 하면 빨라지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율성이 높아짐(efficiency gain)</li> <li>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에 메뉴얼을 바탕으로 기술교육을 받으면, 대체로 쉽게 흡수</li> <li>실행의 경험이 쌓이면 개발도상국 스스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실행역량을 높여나가는 것도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과 서비스의 개념을 최초로 정의하는 역량으로,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힘 그리고 Originals 를 만드는 힘</li> <li>개념설계 역량의 핵심은 스케일업으로 글로벌 챔피언 기업의 핵심역량, 개방형 혁신의 전제조건</li> <li>개념설계 역량은 교과서가 없고, 창의적 암묵지와 사람/조직 문화에 체화되어 있어 移轉 불가</li> <li>개념설계 역량은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learning-by-building), 현장+Learning-by-Doing, 무한도전, Originals 의 필수조건</li> </ul>

[그림 3]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념설계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형 인재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부처 간 이동을 의무화하되 한 보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하도록 시행해야 한다. 공무원 초기 경력 15년 동안 적어도 3개 이상 부처에서 3년 이상씩 근무하도록 하고, 서기관 및 과장부터는 한 부처에서 10년 정도 있는 것을 허용하되, 고위공무원단의 고위 공직자의 이동을 활성화시키는 工 자형 경력 개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기획원(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국립보건원(NI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과 같이 민간 분야의 고위험 혁신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문기관들이 이익 집단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근원적 접근으로 규제개혁도 실현해야 한다. 관치 혁파를 통해 청년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 ◆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교육현장이 아래로부터 변해야 한다. 우선 교육전문대학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초중등 교육의 교사 학습방식을 크게 바꿔야 한다. 대입 자율화를 위해 교육전문대학원을 확대하고, 교육개혁 위원회를 설치한 후 수능자격고사화와 미래형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대안을 내도록 해야 한다. 대학이 혁신전략부(가칭)의 관할 하에 혁신생태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나치게 규제 중심인 교육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 선출 방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 ◆ 자본시장과 노동시장 혁신을 통해 노사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자본과 노동 이동이 유연해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자리 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수평적으로 협력하고 창업 플랫폼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제4차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유인해야 한다. Fintech와 같은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은행의 진입을 허용하고 창업 자본이 회수될 수 있는 M&A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일하는 복지(Workfare)’를 확립해야 한다.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와 연공서열형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정부 및 공공부문 인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노사 대타협과 이익 집단의 반발을 극복해야 경직적인 제도와 관행을 혁신할 수 있다.

- ◆ 한국이 국방혁신을 통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어 북한과의 대화가 성사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국방연구개발을 대폭 개방하고 군 인력체제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미국 전체 R&D의 50% 이상을 국방 R&D가 차지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IT 창업가를 양성하여 혁신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다양한 연구개발 주체와 협력하여 전주기적 민군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조직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국방연구개발 기획의 민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 기술개발 제도인 선행핵심기술 연구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기술주도형 기획을 강화해야 한다.

## ◆ 통합 전략

：우파는 청년 리더십이 강화되도록 노력 하였는가?

- ◆ 세대교체란 기성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들이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길러주어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평적인 조직 구조를 만들어 청년들이 우파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 무한정치 투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헌을 이루어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 먼저 선거제도를 중선거구제로 전환하고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 재창조 전력을 가진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회내 활동을 총괄하는 ‘정무 대표’와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필요한 정책을 정당과 국회에 전달하는 ‘당무 대표’로 당 내 지배구조를 이원화해야 한다.
- ◆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치 검찰 문제를 해소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기능을 축소하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로 재판 기록 전부를 공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사와 판사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
- ◆ 북한 핵 위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안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안보는 국민의



생존을 좌우하므로 전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사시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다양한 작전임무 수행능력을 기르고 방어에서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 제263회 정책세미나 질의응답

### 질문1 '혁신과 통합'의 용어는 진보 성향의 두드러진 표현 아닌가?

**답변** 혁신과 통합은 진보만의 가치가 아니다. 혁신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활력을 유발하는 것이고, 통합의 핵심은 법치다.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다. 흔히들 우파의 문제가 분배와 정의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 말한다. 오히려 정의, 공평, 평등을 앞세워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개인의 자유가 침범 당하는 분배의 역설이 발생하기도 한다. 법치를 확립하고 시장의 활력과 개인의 자유에 중점을 둔 새로운 비전을 우파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

### 질문2 대학을 교육부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을 교육부로부터 분리시켰다. 초중등교육이 대학 입시 준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입시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대학은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 선진국의 행정개편 과정을 상세히 살펴본다면 한국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